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1.7.7(수) 13:30	배포일시	21.7.7(수) 11:30
담당과장	기재부 인구경제과 나윤정 (044-215-8570)	담당자	김형구 사무관 (044-215-8571) hgoo999@korea.kr 박기오 사무관 (044-215-8573) kokio1007@korea.kr

「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」

- 인구감소, 지역소멸,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 -

- 정부는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‘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’을 마련하여, 여성·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, 지역소멸 선제 대응,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함

* 7월 7일(수)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·발표하였음

< 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 >

- ① **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**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
 - ▶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,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·개선,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
- ② **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**
 - ▶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사회적 논의 추진
- ③ **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**
 - ▶ 초광역권계획·특별자치단체 등 통한 지역간 연계·협력 강화
- ④ **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**
 - ▶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, 재택의료센터 도입, ICT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의사-의료인간 협진 활성화
- ⑤ **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·요양·의료 서비스 제공**
 - ▶ 통합판정체계 도입,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개선

I 3대 인구리스크 현황

- 정부는 ①인구감소, ②지역소멸, ③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'20년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* ① '20년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
② '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추월하며 지역불균형 심화
③ '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('55~'63년생, 710만명) 고령층 편입에 따른 고령화 가속

-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①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, ②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, ③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
- 아직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, 앞으로 우리 경제·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(Agequake)을 발생시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

II 그간 정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력

-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①기존의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②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왔음

- '19년과 '20년에 두차례에 걸쳐 1·2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구성·운영*하여 교육·국방·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을 마련하고,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였음

* (1기 TF) '19.4월 출범 → '19.9~11월, 4개 전략·20개 과제 순차 발표
(2기 TF) '20.1월 출범 → '20.8월, 4개 전략·11개 과제 발표

- 하지만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현 시점에 맞는 신규 정책수요 발굴·대응, 구조적 문제 논의, 계속과제 관리 등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임
-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, 인구정책 인프라도 보완한 제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·운영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함

Ⅲ 3기 인구TF 주요 추진과제 (☞ 참고1)

- 제3기 인구정책 TF는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「4+a 추진전략」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함

< 전략1 : 인구절벽 충격 완화 >

◇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우려

⇒ 여성·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,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

- (여성)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
 -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방안을 검토하고,
 -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에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·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·개선함
- (외국인)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고,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구축하겠음
- (고령자)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,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함
- (고용형태)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종사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플랫폼 4법을 추진하고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을 검토함

- (평생학습)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확대하고, 평생학습 서비스 및 플랫폼 간 상호연계를 추진함

〈 전략2 : 축소사회 대응 〉

◇ 절대인구 감소,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급격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증가

⇒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, 1인가구·법률훈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

- (대학) 대학의 다운사이징과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, 한계 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·청산을 지원함
- (숙련인력)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숙련 노하우를 DB화함
- (가족)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1인가구*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

* 가구원수별 비중(%,'20년): (1인) 30.3 (2인) 28.0 (3인) 21.0 (4인) 15.8 (5인+) 4.9

〈 전략3 : 지역소멸 선제 대응 〉

◇ 비수도권은 인력유출로 인한 성장둔화 및 생활여건 악화,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비용 증가 예상

⇒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,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

- (광역거점)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초광역권계획·특별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간 연계·협력을 강화함
- (소멸위기지역) 소멸지역 주민도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등 생활권 연계·협력을 활성화 하고, 지역주도의 패키지형 특화사업을 지원함

< 전략4 : 지속가능성 제고 >

◇ 고령층 부양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초래되는 한편, 요양·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

⇒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·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, 의료·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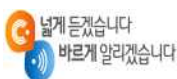
- (재정)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,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 개편을 추진함
- (의료)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, 재택의료센터(가칭) 도입을 검토함
- (돌봄) 고령층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·요양·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,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함

< +α :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>

-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·운영하고,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함

IV 향후 발표계획 (☞ 참고2)

- 4대 전략별 대책은 7월부터 시리즈로 순차적으로 발표함
 - 대책은 과제 성격에 따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임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고 2

제3기 인구정책 TF 발표 일정(안)

안건		발표	일정
① 총괄 안건 및 외국인력 부족 대응		경제 중대본	7.7일
▶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(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)	기재부		
▶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	법무부		
② 인구절벽 충격 완화		경제 중대본	7월말
▶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	고용부		
▶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	고용부		
▶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 완화	여가부	사회관계 장관회의	7월말
▶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	교육부 고용부		
③ 축소사회 대응 및 추진기반 확충		경제 중대본	8월말
▶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	산업부		
▶ 급격한 인구변동 대비 인구통계 개선방안	통계청		
▶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고용·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	경인사연	사회관계 장관회의	8월말
▶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	교육부		
▶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	여가부		
④ 지역소멸 선제대응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	경제 중대본	9월 중순
▶ 지역소멸 대응	국토부 행안부		
▶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복지부		

참고 3

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달라지는 사회 모습

구분	달라지는 사회 모습
여성	<p>①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이 완화되어 경력유지가 용이해집니다. ▶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검토,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확대·개선,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</p> <p>② 가사근로자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사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이 줄어듭니다. ▶ 가사근로자법 제정 후속조치로 시장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마련</p> <p>③ 노동시장 내 성 격차가 완화되어 여성의 능력 발휘 기회가 늘어납니다. ▶ 적극적 고용개선조치·성평등 현황 공시제 개선, STEM 여성 진출 강화</p>
고령층	<p>①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납니다. ▶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사회적 논의 추진</p> <p>②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집니다. ▶ 재택의료센터 도입, ICT 활용한 의료 취약지 의사-의료인간 협진 활성화, 고령층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마련</p> <p>③ 누구나 필요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. ▶ 돌봄·요양·의료 통합판정체계 도입, 돌봄인력 확충 및 질적 개선</p>
지역 거주민	<p>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튼튼해집니다. ▶ 지역성장 거점으로서의 국립대 혁신,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, 외국인재 지역 정착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</p> <p>②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가진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합니다. ▶ 초광역권계획 수립, 지역차원 행정통합 논의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검토</p> <p>③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. ▶ 지역간 생활인프라 공동이용, 지역 주도의 패키지 특화사업 추진</p>
전국민	<p>① 성인도 적극적으로 능력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. ▶ 평생학습 서비스플랫폼 간 상호연계, 대학의 다양한 성인대상 학사제도 운영</p> <p>② 플랫폼 종사자로 일해도 충분히 보호받는 사회가 됩니다. ▶ 플랫폼 4법 추진,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검토</p> <p>③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차별없이 보호하는 사회가 됩니다. ▶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개념 확대, 1인가구 지원강화 및 차별적 법제도 개선</p> <p>④ 산업현장의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▶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, 숙련인력 노하우 DB화 및 숙련기술 전수</p> <p>⑤ 앞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만들어집니다. ▶ 인구통계 인프라 개선, 인구정책 연구단 구성·운영</p>

참고 4

관계부처 담당자 연락처

관계부처	담당과	담당과장	담당자
기재부	인구경제과	나윤정 (044-215-8570)	김형구 사무관 (044-215-8571) hgoo999@korea.kr
			박기오 사무관 (044-215-8573) kokio1007@korea.kr
교육부	미래교육전략팀	이상범 (044-203-7180)	강성화 사무관 (044-203-7182) strongh11@korea.kr
법무부	외국인정책과	김현채 (02-2110-4105)	김준철 사무관 (02-2110-4109) kjc5623@korea.kr
행안부	균형발전정책팀	양대성 (044-205-3507)	곽부영 사무관 (044-205-3505) kbysms@korea.kr
산업부	산업일자리혁신과	김재준 (044-203-4220)	권태성 사무관 (044-203-4227) tskwon@korea.kr
복지부	인구정책총괄과	김충환 (044-202-3370)	김효리 사무관 (044-202-3408) hyolee.kim@korea.kr
고용부	기획재정담당관	박종환 (044-202-7026)	김현아 사무관 (044-202-7028) airxcloud@korea.kr
여가부	기획재정담당관	김숙자 (02-2100-6061)	이준호 사무관(02-2100-6062) uklee58@korea.kr
국토부	국토정책과	정의경 (044-201-3646)	임정환 서기관 (044-201-4950) trade149@molit.go.kr
중기부	일자리정책과	정기환 (042-481-1661)	장상만 서기관 (042-481-4469) jsangman@korea.kr
과기부	미래인재정책과	허재용 (044-202-4820)	박수진 서기관 (044-202-4824) sujin123@msit.go.kr
농식품부	농촌정책과	최정록 (044-201-1511)	송현주 서기관 (044-201-1518) songjh@mafra.go.kr
통계청	인구동향과	김수영 (042-481-2250)	유수덕 사무관 (042-481-2261) sudeok71@korea.kr